

# 안녕, 구름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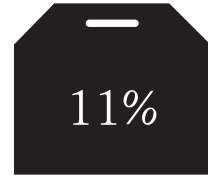
2002. 12 유네스코, 구럼비 바위 해안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



구럼비 바위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범성에서 1~2km 정도 떨어져 있다. 가까운 거리에 하나로 이어져 있는 자연을 칼로 잘라 여기까지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상식적이라는 주장이 있다. 당시 해녀들은 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물질을 못하게 되는 상황을 염려해 반대했고, 유네스코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한다.

유네스코 | slo.ms/grb01 미디어오늘 | 2012. 03. 07 | slo.ms/grb02

2009.08 김태환 제주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발의 및 투표



제주해군기지 유치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7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주민소환을 발의했다. 하지만 투표율이 11%에 불과해 주민소환법상 개표요건인 전체투표인의 3분의 1 투표율에 미달되어 주민소환은 무산되었다.

한겨레21 | 2009. 08. 14 | slo.ms/PYK5R3

2011.05 시민·환경·평화단체, 제주해군기지 건설 백지화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결성



강정마을을 해군기지 건설 예정지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는 점 이외에도, 해군이 국회 진상조사단과 제주도의 공사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지 건설을 강행하고 주민들에 대한 정신적·물리적 위협을 조장하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 2011. 05. 30 | slo.ms/Tv7qEi

2012.03 해군, 구럼비 해안 발파작업 개시



제주도의 공유수면 매립 공사 정지처분과 관련한 청문을 하루 앞두고 해군이 구럼비 바위에 대한 발파를 기습적으로 실시했다. 발파 지점은 강정항 동쪽 100m 부근으로 기지 공사 전에는 너럭바위와 함께 물이 군데군데 고였던 곳이다.

연합뉴스 | 2012. 03. 19 | slo.ms/XlUyaP

2007. 05 제주도, 강정마을을 제주해군기지 최우선 대상지로 선정



강정마을 주민 1,500명 중 일부(80여명 또는 120여명)만 참석한 상태에서 주민총회가 열렸고, 총회의 내용도 처음에는 '해군기지 관련 건'이었다가 추후 '해군기지 유치 건'으로 바뀌었다. 총회의 결정으로 인해 강정마을이 해군기지 유치 후보지가 되었고, 여론조사를 거쳐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유치하기로 결정했다.

한겨레21 | 2007. 6. 14 | slo.ms/Z3sw2p 민중의소리 | 2010. 01. 22 | slo.ms/grb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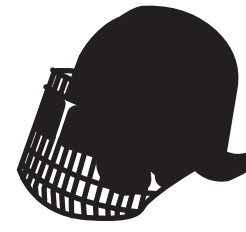
2009.12 제주도의회, 구럼비 바위 해안에 대한 절대보전지역 지정 해제



제주도는 구럼비 바위 해안의 높은 가치에 주목해 2004년 10월 형상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한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절대보전지역은 2009년 12월 제주도의회에서 야당 도의원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날치기로 해제됐다.

한겨레 | 2012. 03. 07 | slo.ms/TMu0gr

2011.08 서귀포경찰서, 강정마을회 강동균 회장 등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강 회장 등은 제주해군기지 공사 재개를 막기 위해 크레인에 올라갔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연행됐다. 경찰은 당초 강 회장 등을 석방하기로 약속했지만 검찰이 구속지휘를 내리면서 영장이 신청됐다.

제주의소리 | 2011. 08. 26 | slo.ms/RGGHbC

2012.07 대법원, 제주해군기지 적법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계획을 취소해달라며 강정마을 주민 438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방·군사시설 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반면 일부 대법관은 명백한 무효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한겨레 | 2012. 07. 05 | slo.ms/UaCD09

> 제주해군기지 사건 흐름

